

# 朝鮮後期の 社會經濟的 發展과 그 性格

李 鎬 澈

이 글은 18, 19세기 한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규명하기 위해 당시의 농업과 사회경제에 관한 새로운 시계열 자료를 발굴하고, 그 분석결과를 동시대 일본 및 중국의 그것과 비교해보려는 시도이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는 소비기적 현상을 보인 당시의 기상재해와 그에 바탕을 둔 토지공급의 정체와 인구증가, 다양하게 발달하였던 집약농업과 상품유통의 발달, 계급변동과 도시팽창, 교육과 실학사상의 변화, 그리고 이를 축으로 한계적으로 만난 서양과학 사상의 영향 등에 대해 논하였다. 무엇보다 이 연구가 해명하려는 문제는 이와 같은 조선후기의 발전적 모습 끝에 나타난 '19세기적 정체'의 본질을 밝히는 데 있다. 사회경제 발전의 기초가 소농중심의 농업경제였던 조선후기에서 농업과 인구가 발달한 곳일수록 그러한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하였다는 사실은 '19세기적 정체'가 바로 경제발전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사실 공업화 이전에 존재한 하나의 문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선후기적 발전은 결코 그 스스로 자본주의적 근대 사회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이러한 발전양상은 밖에서 이식된 자본주의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하나의 독자적인 발전단계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조선후기적 발전이 정체기를 맞은 '19세기'는 바로 이 때문에 '새 문명을 위한 준비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지주제적인 생산양식과 그에 기반한 조선국가의 위기를 가져왔던 '19세기적 정체'는 당시 피지배 계급에게 새로운 기회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 1. 머리 말

한국사에 있어 조선후기 사회와 경제에 대한 탐구는 어느 것보다 풍부한 연구사를 자랑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주로 경제사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이끈 새로운 연구경향들은 '內在的 發展論'이란 이름으로 조선후기의 발전상을 여러모로 밝혀냈음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다. 그렇지만, '韓國 中世社會의 解體期'였던 이 시대가 근대사회를 향한 강한 지향을 보인 시대였음이 비록 분명하다고 해도, 아직도 여전한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음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 발전의 진원이라 할 농업에 대해서도 규명되지 않은 일들도 적지않은 데다, 사회 경제발전을 검증해낼 중요한 수단인 인구사적 해명도 결코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발전적인 연구경향은 아직 사회사와 문화사의 충분한 뒷받침을 통

해 조선후기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질을 규명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다. 더구나 그동안의 연구들은 1876년의 개항 이후 식민지로의 전락과정과 어떻게 연결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1960년 이후 달성된 한국의 성공적인 공업화 과정에 어떠한 배경이 되었는가를 밝혀내지 못하였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사회과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경향들만이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향한 의미있는 접근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새로운 연구결과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18, 19세기의 사회경제 발전을 객관적으로 체계화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와 함께 필자는 이 시대 농업변화와 사회경제에 관한 새로운 時系列 資料를 최초로 발굴,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변화들을 전체 및 지역별로 수량화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은 문헌 자료에만 의존한 기존의 연구들을 보완하고, 이 시대 문제를 보다 객관화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서양의 연구자들과 국내의 연구자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연구의 공백을 메우는 일도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다.

이처럼 18, 19세기 조선의 發展的 變化를 규명하는 일은 '왜 요즘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경제가 국제적으로 부상하는가'란 문제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더구나 그러한 사실은 이 시기 조선사회의 발전과 변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가 결코 내재적 발전론의 좁은 범위만으로 설명될 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비슷한 발전 모습을 보인 '중국의 淸' 및 '德川時代의 일본'의 시대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서유럽과 대비되는 동아시아적 발전모델을 규명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sup>(1)</sup>

## 2. 朝鮮後期 社會의 氣候와 災害

### 2.1. 朝鮮前期의 氣候

농업이 산업의 중심이었던 조선후기의 여러 자연현상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降雨量과 氣溫'이다. 조선왕조는 이미 15세기 초부터 測雨器로 강우량을 과학적으로 관측해 왔다.<sup>(2)</sup> 현재 남아있는 자료는 서울의 창덕궁과 경희궁의 측우기로 관측된

(1) 19세기 말에 겪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兩極分解'는 일본의 성공과 조선과 중국의 실패를 결과 하였다. 물론 그 원인은 내부적 요인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들에서 더 많이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히 일본의 경제발전에 뒤이은 한국과 중국 경제의 급속한 공업화과정은 결코 우연일 수만은 없다. 그런 점에서 산업사회화의 前夜였던 18, 19세기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전모델의 구성은 절실한 과제일 것이다.

(2) 물론 이 관측자료들은 현대기상학의 관점에서 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른바, 기준 이하의 미세한 강우는 관측하지 않았으며, 특히 그 때문에 강설일 측정에는 더욱 문제가

기록인데, 그 137년간(1770년부터 1907년까지)의 측정결과인데, 이는 매월별로 보존되어 있다. 그외에도 조선후기에는 무려 283년 동안(1626년~1912년) 월별로 강우일을 기록한 시계열 자료가 남아있다.

이를 종합한 조선후기 강우량은 매 3년마다 격심하게 변동하였는데, 이는 곧 심각한 재해로 이어져 農業生産의 不確實性을 가증시켰다. 먼저 가뭄에 대해 살펴보면, 특히 17세기 말에서 1722년 사이에 '연강우일수가 20-30일에 불과' 한 시기가 있었다.<sup>(3)</sup> 물론 이러한 기상이변은 여러 문헌자료에서 수많은 기근이 발생했다는 기록으로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770년대와 1809년~1827년간, 그리고 1857~1860년대에도 비가 적게 내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였다. 아마 이 시기에는 파종기와 장마기 동안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매우 큰 가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7~8월의 洪水는 1629년 7월 3일의 기록에서 1859년 7월 27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141회가 기록되었다. 이는 대략 1.63년에 한번 꼴로 홍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홍수 피해는 가뭄에 비해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가뭄이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조선후기의 기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제 갓 시작된 연륜기상학 연구결과를 참고할 수밖에 없다. 박원규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중부 산간지방의 기온은 약 13년을 주기로 저온기와 고온기가 되풀이' <sup>(4)</sup>되었다고 한다. 1770년까지 복원된 4~5월의 평균기온에서는 1835년에서 1848년 사이에 혹독한 저온기가 있었으며, 1636년까지 복원된 7~8월의 평균기온에서는 [1676년~1693년], [1838년~1847년]의 기간에 한냉한 여름이, 그리고 [1793년~1803년], [1851년~1895년] 간에는 더운 여름이 계속되었다고 한다.

## 2.2. 朝鮮後期の 農業環境

한국의 기후는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적 성격을 가졌다. 이른바 중국과 맞먹는 봄가뭄(春旱)과 일본을 능가하는 집중적인 여름 장마(夏雨), 그리고 작물의 월동이 곤란할 만큼의 겨울추위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그러한 기본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기

---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조선시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관상감 관리들이 나름대로 일관된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 수백년 동안 관측한 결과였다는 점 때문에, 이 시대 강우량 파악을 위한 일차자료로서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 비록 이는 강우량의 객관적 관측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통해 강우량 변동을 살피는 데는 매우 좋은 자료일 수밖에 없다.

- (3) 이러한 변화가 단지 자료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의 사실인지를 밝히기에는 아직 연구 수준이 충분하지는 않다. 그렇지만, 이 시기가 심각한 기상재해의 시기였다는 점에서 결코 기재 부실의 이유만은 아니란 사실은 분명하다.
- (4) 충북대 박원규 교수팀이 행한 다음의 연구들을 들 수 있다(한겨레신문 1993년 11월 4일자 참조): Choi, Yu, and Park(1992), Park(1993).

후는 기온과 강우량의 두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여 왔다.

특히 강우량과 기상의 두 측면을 모두 함께 살핀다면, 조선후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초에 이르는 기간, 그리고 19세기 전반에 가장 심각한 '가뭄과 冷害'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18세기 중반 이후는 전체적으로 1,200 mm를 전후하는 풍부한 연강우량과 온난한 기온을 가졌으며, 또한 19세기 후반도 온난하였다. 그렇지만 1770년대와 1860년 대에도 일시적인 가뭄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의 地形條件도 매우 중요한 자연환경이다. 한국은 중국의 황토지대와 다른 토양조건, 그리고 전국토의 70%가 산이어서 평야지대보다 산지가 월등하게 많아서 대부분의 농사작업이 계곡간에 위치한 경사지에서 전개되었다. 오늘날과 같은 대규모 토목사업이 불가능한 당시에는 인공관개는 매우 어려웠고, 따라서 매우 건조해서 오랫동안 작물재배를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18, 19세기에 그 생산이 크게 확대된 한국의 벼농사가 다른 나라의 그것과 달리, 얼마나 어려운 조건에서 전개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한국의 지형과 기후조건은 일본 및 중국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달랐으며, 농업생산 전반과 모든 경제행위, 그리고 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 2.3. 朝鮮後期の 災害

조선시대에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지에 대해 국가가 田稅를 감면해주었는데, 이는 바로 농업재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이다. 특히 給災免稅結의 면적은 8도별로 136년 동안(1744년부터 1880년까지)의 시계열 자료로 남아있다. 이러한 급재면세결도 중앙정부가 재해를 조사하여 각도에 할당해준 면적인 事目田과 각도의 관찰사들이 요청하여 면세허가를 받은 狀請田으로 나뉘지만, 이 기간은 比總制가 실시된 때여서 후자의 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를 보면, 재해로 인한 면세결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1809년에서 1824년간의 시기였다. 1744년 전후의 시기를 100이라 할 때, 이 때 재해 때문에 세금을 내지않은 토지면적은 200에 달할 정도로 높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심한 기간은 1764년에서 1772년간의 시기였다. 또한 재해는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였다. 특히 1764년~1772년 동안에는 남부지방에서 재해가 주로 나타났는 데 비해, 1809년~1824년간은 남부와 북부지방이 재해에 휩싸였다. 그에 비해 중부지방은 비록 같은 시기에 비록 재해를 입었지만, 것처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았다.

이러한 농업재해는 대체로 降雨量과 氣溫異變의 결과로 판단된다. 특히 그러나 1809년~1824년간은 강우량과 기온의 이변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64년~1772년

간의 시기는 기온보다는 강우량의 감소가 눈에 드러난다. 비록 수량적인 자료로 검토할 수 없지만,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까지의 기간도 재해가 심각하였음이 여러 문헌자료에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 시기를 살았던 조선후기의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조건 속에서 살았으며, 특히 재해를 극복해 가면서 농업생산을 발전해갔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自然條件의 이해는 이 시대 경제와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였다고 생각된다.

### 3. 土地와 人口

#### 3.1. 土地供給의 停滯

##### 3.1.1. 朝鮮時代 前後期の 土地面積

조선후기의 농지면적은 과연 어떠했는가? 조선전기의 토지면적과 비교할 때, 조선후기의 실제면적은 얼마나 되었으며 봉건국가는 이중에서 얼마정도를 행정력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가. 조선후기 전결수에 대한 시계열 자료 가운데서, ‘土地面積의 單位’가 아니라 ‘生産量의 單位’인 結로 기록되었던 수치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또한, 그 가운데서 한전과 수전의 면적이 각각 얼마였는지도 당시 농업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관건이다.

조선전기의 문헌에 기록된 田結수는 대략 152-171만결에 달하였다. 그에 비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직후의 조선후기 전결수는 그 3분의 1에 불과하였다. 그 토지면적은 이후 점차 증가하여 19세기 후반에는 149만결에 달하지만, 이와 같이 배로 늘어난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토지면적은 그보다 적었다는 사실은 합리적으로 이해되기 어렵다.

조선후기 토지면적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첫째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의 結면적이 결코 같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1634년에 실시된 甲戌量田에서는 전쟁으로 유실된 세종 때의 양전척 대신 甲戌尺이란 새로운 양전척이 사용되었다. 갑술척은 종래의 양전척보다 포금척으로 1촌(寸)이 더 긴 것이 발견되었지만, 이후에 실시된 조선후기의 양전은 모두 갑술척이란 새 양전척으로 계속 추진되었다.<sup>(5)</sup> 박홍수(1967, pp.221-223)의 추계에 의하면, ‘1등전 양전척’의 경우 새 양전척은 종래의 99.36 cm보다 긴 104.03 cm여서, 1결의 면적은 종래보다 넓은 1082.870 평방미터(m<sup>2</sup>)가 되었다. 이는 조선전기의 1결 면적을 100이라고 할 때 조선후기의 그것은 109.6에 달할 정도

(5) 1653년(효종 4년)과 1719년(숙종 45년) 등 이후의 대표적인 양전에서도 세종 때의 양전척으로 실시하려고 의도했지만, 실제의 양전에는 갑술척이 사용되었다.

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조선후기의 149만결은 조선전기의 결로 환산할 때, 대략 163만결에 달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조선후기의 토지면적이 적은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필자의 추계에 따르면, 만약 19세기 말 당시의 조선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던 토지면적은 실제면적의 대략 53%에 불과하였다.<sup>(6)</sup> 결국 국가권력의 심각한 이완기에 직면해있던 조선정부는 점차 토지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갔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19세기로 갈수록 심각하여 국가의 파악에서 漏落된 土地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경작면적은 국가 토지대장의 기록과는 달리, 조선전기의 그것보다 증가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지만 인구에 비해 토지증가는 크게 제약되었으며, 결국 이는 토지에 대한 인구압력을 크게 높였다. 이러한 토지공급의 정체는 이 시대 농업생산의 집약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 3.1.2. 國家가 把握한 田結數의 構成과 變化

1744년부터 135년간의 전결수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度支田賦考』를 보면, 조선국가는 전국의 토지를 세금을 내는 결수인 出稅實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재해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준 결수인 給災免稅結, 그리고 다른 여러 이유로 세금을 면제받은 결수인 諸般免稅結의 크게 보아 세 종류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다.

먼저, 이 3종류 토지의 합계인 총결수의 흐름을 살펴보자. 전국의 총결수는 1776년부터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완만한 증가세는 '경작할 만한 토지는 거의 다 경작되었다'던 조선후기의 토지사정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1776년의 1,438,715결이 1847년에는 1,458,720결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sup>(7)</sup>

그러나 그러한 총결수의 변화는 지역에 따라 매우 달랐다. 대체로 충청 황해 함경 평안도의 경우는 총결수가 보다 급속하게 증가하였는 데 비해, 경상 전라 강원도의 경우는 거의 정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경기도는 1860년대부터 총결수가 감소하였다. 이는 토지공급이 과포화 상태에 놓여진 남부지역과는 달리, 아직도 토지개발의 여력이 남은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중되는 인구압력 때문에 급속한 개간이 진행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출세실결'의 흐름을 살펴보자. 출세실결은 잦은 재해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6) 1918년에야 완료된 '土地調査事業'의 결과, 파악된 전국의 정확한 토지면적은 약 434만ha였는데, 이는 19세기에도 그와 유사한 면적의 농경지가 경작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수정은 그러한 가정에 따라 계산한 결과이다.

(7) 이를 다시 회귀분석해본다면, 1745년의 1,458,720결이 1847년에는 1,476,251결로 추정되는데, 이는 연간 0.02% 정도의 매우 완만한 증가율로 드러나고 있다.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는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여, 1744년의 854,283결이었던 결수가 1847년에는 782,881결로 감소하였다. 총결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세를 징수한 토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더구나 실제로 세금을 징수받은 實上納 금액도 늘 10% 정도가 모자라서 國家的 財政危機를 가속화하였다.

한편, 제반면세결은 대략 5가지 종류의 면세결들로 구성되었다. 이 결수는 출세실결과 달리 만성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른바, 1776년에 587,425결이 1849년에는 639,718결로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감소하는 출세실결과 격차를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왕 등의 무덤(陵園墓位)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 왕실 비용을 위한 여러 궁방(各宮房), 국가기관의 운영경비를 위한 衙門田의 4종의 토지를 면세하는 것은 아마 토지경제에 기반한 국가로서는 당연한 일이다. 이 4종류의 면세결들은 제반면세결의 3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제반면세결의 확대는 이의 70%를 차지<sup>(8)</sup>하였던 由來陳雜頃田의 증가의 결과였다. 이는 실제로는 농사를 짓는 땅이지만, 여러 이유로 토지대장에는 陳廢한 것으로 빠져있는 토지로서 국가적 재정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유래진잡탈전의 구조적 증가가 빚은 문제상황은 비록 봉건국가의 재정위기를 심화시켰다. 그렇지만, 그것이 곧바로 전체경제의 위기일 수는 없다. 즉, 토지면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으며, 계속된 출세실결의 감소는 이로 인해 더욱 많은 이익을 창출 수 있는 계층들을 낳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3.1.3. 水田의 增加와 그 變化

조선후기의 토지 가운데서 수전의 비중은 얼마나 되었을까? 『世宗實錄地理誌』에 의하면, 조선전기에는 결수로만 파악할 때 水田이 전체의 약 27.9%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수전은 19% 정도에 불과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전국 수전결수를 보여주는 자료<sup>(9)</sup>에 의하면, 1807년경의 수전은 528,990결로서 전체 결수의 36.3%에 달하였다. 또한 1913년에 그 결수 비중은 전체의 무려 50.1%를 차지하였다[Government-General of Chosen(1915)]. 이는 18세기까지 조금씩 늘었던 수전면적이 19세기 들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결국 19세기는 수전비중이 급속히 증가하여, 종래 낮은 비중에 머물렀던 벼농사가 총농업생산의 50% 수준으로 크게 확산해간 시기였음이 분명하다.<sup>(10)</sup>

(8) 1847년의 비중이다.

(9) 『萬機要覽』財用篇, 八道四道元張付田番.

(10)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1919~1921년 동안의 평균 수전면적은 약 1,543,485 ha이었고, 그 비중은 35.7%를 차지하였다. 이는 곧 결수로는 50.2%의 비중을 가졌던 수전이 면적 비중으로

한편 각도별로 수전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평안도를 제외한 모든 도에서 수전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삼남지방은 1807년까지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19세기 들어 수전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그에 비해 경기 강원 함경도 등은 수전결수와 비중이 조선후기 동안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사실은 19세기 들어, 수전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농지구성이 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 3.2. 朝鮮後期 人口의 變動

#### 3.2.1. 人口의 成長과 停滯

먼저 조선후기의 계급구성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시대의 인구수와 그 증가율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미 필자는 1392년의 인구가 대략 750만명이었는데, 이 인구가 1592년경에는 1,012만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인구증가율이 0.15~0.20%였었다고 대략 추정한 바 있다. 비교적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조선말기의 인구수(1910년에 약 1,750명)와 비교할 때, 조선후기에 있어 인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조선후기의 인구 통계자료는 1639년부터 거의 매 3년마다 조사된 戶口조사 결과인 『왕조실록』이나 『호구총수』와 같은 기록에 거의 완벽하게 남아 있으며, 심지어는 그 조사의 원자료인 호적이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호구조사에 근거한 이들 자료는 오늘날의 인구학적인 관점의 실제호구와는 거리가 멀다. 추정컨대 이 인구수는 40~50%에 달하는 엄청난 누락인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1)</sup>

비록 그렇지만, 이 자료는 당시의 조선국가가 나름대로의 일관성을 가지고 수백년에 걸쳐 조사한 자료란 점에서 전반적인 추세를 찾는 데는 매우 유용한 자료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두 차례의 전쟁으로 크게 감축된 인구가 17~18세기(1639~1810)에 걸쳐 연평균 증가율이 0.338%란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또한 19세기(1810~1884)에는 0.08%라는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증가율과 1910년 인구수에 근거하여 추정된 조선후기 인구규모는 전쟁으로 감축된 854만명(1639년)이 1,510만명(1810년)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어 19세기에도 계속 증가하여 1884년에는 1,600만명에 달하였다고 추계된다[이호철(1992)].

이러한 사실은 조선후기의 인구는 17세기의 '인구폭발'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하였으

---

는 그보다 매우 낮았음을 보여준다. 이는 곧 수전이 한전보다 더 우량한 토지란 점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11) 당시의 호적에는 특히 미성년자, 여자, 그리고 노비 등의 인구가 누락되어 실제인구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며, 특히 18세기 후반 이후 그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와 같은 급속한 인구증가는 무엇보다 조선후기 사회의 총체적 발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종합지표라고 생각된다. 결국 2배 가까이 증가한 인구는 상대적으로 느리게 증가한 농지면적과 비교할 때, 매우 놀라운 농업생산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인구증가는 곧 土地/人口 (man/land) 비율을 크게 바꾸어 노동력보다 토지를 더욱 희소한 자원으로 만들고, 사회 각처에 높은 인구압력을 가하였다.<sup>(12)</sup>

한편, 1810년경부터는 전국의 인구증가율은 크게 체감하였다. 그런데 심지어 그 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이 19세기 인구에 대해, 일부의 학자들은 인구가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체인상은 실제로 인구가 감소했다기보다 국가의 인구 파악 능력(호구조사)의 이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학계의 경우, 이러한 19세기의 인구정체 현상은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豫防的 制限'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더구나 이 인구정체 현상은 심한 지역편차를 보이고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 3.2.2. 地域間 人口構造의 變化

그러나 이러한 조선후기의 인구변동은 지역간에 따라 심대한 격차를 보여주었다. 먼저 조선후기의 八道 인구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이 문제는 보다 분명해진다.<sup>(13)</sup> 무엇보다 이를 분석해보면,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동안 그 인구비중이 크게 줄어든 도들과 그 비중이 늘어난 도들이 뚜렷이 대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조선전기까지 전체 인구의 66~68% 정도를 차지하였던 엄청난 삼남지방의 비중이 1864년경에는 46~51%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두드러진 인구정체로 비중이 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우도, 그 지역의 인구가 거의 포화상태에 달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에 비해 서울과 이를 둘러싼 수도권 지역인 경기지방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자연증가보다는, 도시를 향한 이농인구가 쌓인 결과일 것이다. 한편, 강원도와 함경도의 인구비중은 급속한 증가를 보였는데, 비교적 인구압박이 적었던 이 지역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한 결과였다. 단적인 예로서 1640년대에 전체인구의 4~6%에 불과하였던 함경도의 비중이 1904년에 7~13%로 급속히 증가한 것도, 이 지역의 인구가 농업생산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9~17%로 늘어났던 평안도의 비중이 19세기에 12%로 다시 하강한 것은, 아

(12) 실제 이와 같은 인구추세는 같은 시기 일본의 사례와 매우 유사하였다고 추정된다.

(13) 조선후기의 8도 호구를 보여주는 자료는 그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필자는 1640년에서 1904년간에서 찾아지는 모두 23개년 동안의 표본자료를 근거로 이를 분석하였다.

마도 1811~12년에 진행된 ‘평안도 농민전쟁’의 결과일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의 인구증가가 비록 전체적인 현상이었지만, 특히 종래의 농업중심지였던 삼남지방보다 중북부지방에서 더욱 급속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인구 정체기에 있어서 그러한 인구성장의 차이점은 더욱 뚜렷하게 벌어졌다. 이는 새로운 농업기술의 전파와 농지개간의 진행으로 이 지역인구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던 중북부지방에서는 19세기에도 인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해나갔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19세기를 단지 경제정체기로만 말할 수 없게 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상에서, 1800년대(1800~1810)를 기준으로 한 국토 평방 킬로미터(km<sup>2</sup>)당 인구밀도를 추계해보면, 경상(112명), 서울과 경기(105명), 전라(100명), 충청(95명), 황해(64명), 평안(59명), 강원(29명), 함경(23명)이었다. 서울과 경기도의 높은 인구밀도를 제외하면 이는 바로 각도의 토지생산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이다. 이는 토지공급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당시 사회에서는 이러한 인구밀도가 바로 당시 경제와 사회발전의 총량적인 결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 4. 韓國的 集約農業의 發展

조선후기는 농업발전과 인구증가가 매우 급속히 전개된 시기였다. 이러한 농업발전은 수전농업과 한전농업의 양면에서 이뤄졌지만, 특히 ‘水田農業’과 ‘商業的 農業’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이 시대의 집약적인 농업발전은 土地生産力(land productivity)의 상승으로 주로 나타났는데, 19세기 전반에는 10a당의 쌀 생산량은 조선전기(1444년)보다 평균 42.5% 증가하였다[이호철(1986, pp.741-751)]. 또한 土地生産力 指數(index)는 17세기 전반을 100으로 할 때, 18세기 전반(159.6), 18세기 후반(167.9), 그리고 19세기 전반(190)으로 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조선전기에 비해 勞動生産性(labor productivity)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 역시 17세기 전반에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조금씩 증가하였다.

결국 조선후기의 농업발전은 조선전기의 그것과 달리 토지생산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는 바로 조선후기에 있어 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물질적 기초였다. 또한 이러한 성향은 급속히 증가된 인구밀도를 바탕으로 18, 19세기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이른바 이러한 집약농법은 좁은 땅을 더욱 집약적인 노동을 투입하여 알뜰하게 가꾸고, 그 생산된 수확물을 시장에다 파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개되었다. 그 때문에, 이 시대에 이르러

농업은 이제 상업과 깊은 관련 위에서 전국적으로 特化(specialization)되어 갔던 것이다.

이 시대의 농업기술은 기본적으로 수전농법과 한전농법으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이러한 농법을 담은 수많은 농서들이 간행되었다. 점차 정부의 경우보다 민간에 의해 더욱 많이 간행된 이 농서들은 17세기의 『농가월령』 『농가집성』 『산림경제』의 단계를 거쳐 18세기의 『증보산림경제』 『해동농서』 『천일록』의 단계로 진입하였다. 특히 19세기의 『임원경제지』 『행포지』의 단계에 이르러 본격적인 한국 특유의 집약적 농업기술로 정착하였다.

#### 4. 1. 水田農法の 發達

##### 4.1.1. 移秧法の 發達과 그 擴散

수전에 벼를 직파하면서도 연작을 하는 한국의 독특한 벼농사기술(水田直播連作法)은 이미 15세기 이전에 완성되었다. 『농사직설』을 보면, 이 기술은 직파법인 水耕(water culture)과 乾耕(Dry culture), 그리고 苗를 이식하는 移秧法(transplanting)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된 재배법은 두말 할 나위도 없이 수전에 芻씨를 직파를 하는 수경법이었다. 이 단계의 벼농사 기술은 수전을 새로 개간하고 개간된 수전을 熟田化하려는 데 주안을 두었다. 또한 아직도 많은 기술상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移秧法은 경상, 강원 의 두 도에서만 한계적으로 행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노동력이 부족한 대농층의 제조문제 해결책이었거나 특수한 토양에서만 어쩔수 없이 요구된 데 불과하였던 것이다. 정부도 이양시에 가뭄이 발생되면 농사를 모두 망친다는 이유로 이를 법으로 금하고 있었다[이호철(1986, pp. 52-57)].

이처럼 미비하였던 조선전기의 이양법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크게 바뀌었다. 17세기에 이르러 이양법이 보다 널리 확산되었음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農家月令』(1619)에서 ‘마른 못자리 기술’(乾秧法)이 개발된 것은 이미 이양법이 조금씩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17세기 초의 농서인 『閑情錄』에서는 직파법 대신 이양법만 기록하였고, 1655년에 공주목사 신숙이 간행한 『農家集成』에는 이양에 관한 신기술을 많이 보충하였다. 이처럼 이양법은 17세기 전반에는 삼남(경상, 전라, 충청) 지방으로 전파되었고, 17세기 후반에는 전국 각지로 확산되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처럼 재배지역이 확대되었다고 해서 각 지역의 내부에서 이양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의 전환이 보다 더 진전되었다고 하더라도 17세기의 이양법은 수리안전답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불과하였다.<sup>(14)</sup> 이양법은 제조회수를 4회

(14) 宮嶋博史는 이미 17세기 전반기에 이양법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양법

에서 2회로 절약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으로만 평가되고 있었고, 새로 增補된 기술들도 대부분 早稻와 못자리(秧基)에 대해서만 집중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사정은 17세기 후반에 심각한 가뭄과 한랭한 여름이 있었다는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적어도 18세기초에 이르기까지는 부족한 강우량 때문에 위험부담이 보다 큰 이양법이 널리 시행되기에는 적지않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임진왜란(1592~1599)과 병자호란으로 피해를 입은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농업노동력의 절감이 절실하게 요청되었고, 그 때문에 제초노동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양법이 수리안전답을 중심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두 차례 전쟁 이후 대규모적인 개간을 진행하였던 신흥지주층에 의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은 18세기에 들어와서 크게 변하였다. 노동력 절감을 위해 수리안전답을 중심으로 전개되던 17세기적인 상황에서 이양법이 18세기 전반부터 天水畚(rain paddy)에까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18세기 후반의 농서 『千一錄』의 단계에 이르면 이양법은 이제 노동생산성보다 토지생산성을 높임으로서 ‘內部的인 限界’(intensive margin)를 높이는 방향으로 박차를 가하였다. 이제 못자리뿐 아니라 이양한 논에도 집약적인 시비가 이뤄졌으며, 직파법과 맞먹는 3-4회의 제초작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이양법을 주도하는 농민층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른바, 17세기 이래 대농층과 신흥지주층에 의해 주도되어온 이양법은 그 기술적 성격의 변화 때문에 이제 소농층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양법으로 소작을 주기보다 임금노동을 이용하여 넓은 토지를 직접 재배할 수 있게 된 새로운 농민층들은 이를 통해 부농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였다. 또 이 시대에는 이양법을 금지하였던 종래의 농업정책은 크게 후퇴한 대신, 이양법 보급으로 인한 심각한 생산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점차 마련되었다. 벼를 수확한 논에 보리를 심는 畚中種牟法과 가뭄에도 못자리를 만들 수 있는 乾秧法, 그리고 이외에도 조기재배와 재해에 강한 품종을 장려하는 등의 대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19세기 전반에 이르면 이제 벼농사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전국 수전의 70~80%가 이양법으로 재배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당시 대농학자 서유구는 이러한 현상을 ‘쌀밥을 먹는 風潮’가 그 어느 때보다 확산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밭을 논으로 만드는 ‘반답’(反畚) 행위를 새로운 풍조로 크게 유행시켰다.

---

전과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견해이다. 조금만 상세히 검토해 보아도 적어도 17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이양법은 그 범위가 주로 조도와 수리안전답이란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정부는 재해를 이유로 번답을 금하는 소극책으로만 일관하였다. 특히 19세기에도 1809년~1824년 간과 1860년대에 매우 심각한 한발이 여러 번 발생하였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민들은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였다. 비록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리시설의 획기적인 확충은 근대적인 토목기술이 사용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농민들은 재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 특유의 농업기술을 창안하였다. 이미 개발되었던 건양법과 한발에 강한 신품종의 도입 외에도, 정부가 관리해온 대규모 저수지(堤堰) 대신 농민들의 힘만으로 개발이 가능한 소규모 수리시설의 확충(보, 구거 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 4.1.2. 直播法の 새로운 發達

한편, 『농사직설』에 기술된 건경법도 점차 발전해 나갔다. 극심한 가뭄에 견디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우리 특유의 기술인 건경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국의 중부와 서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미 18세기초의 『산림경제』 단계에서부터 건경에 가장 알맞는 벼품종들이 출현하였을 뿐 아니라, 가장 집중적인 노동이 요구되는 이 기술의 노동절감을 위해 특수한 농구들이 고안되어 마침내 축력일관 작업이 완성되었다.

이러한 건경법의 발달과 더불어 17세기 이전의 주요한 벼재배법이었던 직파법도 점차 새로운 발전을 보였다. 18세기에 이르러 직파법은 골짜기 논(洞畓)과 같은 특수지역의 벼농사에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 경우 제초작업에서의 노동절감을 위해 이앙법을 원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였다. 이제 이앙법의 발전과 더불어 건경법과 직파법도 발전하였으며, 특히 서북지방에 사용되었던 발전된 乾畓直播 농법은 세계에서 유일한 독자적인 기술 체계로 확립되었던 것이다[Lee(1989)].

이처럼 19세기에 이르면 벼농사는 이앙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그나마 소농민경영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제 이앙법은 처음의 조방농법에서 오직 토지생산성만을 높이기 위한 집약농법의 대명사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소농들은 지주제 아래에서 집약적으로 생산한 벼를 지주에게 소작료로 납부하였고, 지주들은 이를 시장에서 상품화하였다. 그러나 임노동을 이용하여 최대의 상업작물이었던 벼를 가능한 한 많이 생산하여 부를 축적하기 위한 부농경영도 매우 발전하였다. 결국 벼농사는 점차 상품화폐 경제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것이다.

### 4.2. 旱田農業의 發達

#### 4.2.1. '1年1作' 式 作付體系의 變化

조선후기 한전농업의 발달을 규명하려면, 조선전기 한전농법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15

세기의 한전 작부체계는 '1년1작' 식·'1년2작' 식·'휴한'의 세 종류로 구성되었지만, 그 지배적인 형태는 '1년1작' 식이었다. 물론 이미 『농사직설』에서도 '根耕'이란 '1년2작' 식 윤작체계가 행해졌으며, 또 빈농층의 경우 작물이 자라고 있는 밭 고랑에 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間種'도 전개되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는 우등지에서만 행해지는 예외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그러한 전기적 사정은 17세기 『농가월령』의 단계에 이르러 변하기 시작하였다. 경상도 상주군에서 저술된 이 농서에서는 麥作이 반드시 다른 작물의 윤작에 동원되는 '1년2작' 또는 '2년3작' 식의 작부체계가 이미 발전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火耕法과 같은 조방농법이 사라졌음도 눈에 띈다. 또한 파종 및 作畝法에서도 집약적인 방식이 나타나고, 麥田에 콩과 조를 간종하는 '골고리'란 間種法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특히 이 '골고리' 농법은 작묘법에서부터 집약화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농가월령』의 집약농법은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를 잇는 중요한 고리였다. 조선후기에 있어 이러한 한전 작부체계의 고도화는 '근경'과 '간종'의 두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먼저 근경에 대해 살펴보자. 根耕은 1년 동안 하나의 한전에다 한 작물을 다 재배한 다음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고도의 윤작체계(cropping pattern)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越冬作物인 보리와 밀의 사용이 필수적이었다(민성기(1982)).

먼저 17세기의 경우를 보면, 아직 이 단계에서는 근경이 전체 한전의 1/4이나 1/3의 범위에 속하는 우등한 밭(良田)에서만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윤작체계 도입을 강제하기 위해, 한전작물에는 재해를 입어도 전세를 감면하지 않는다는 '旱田不給災'라는 법규를 둘러싼 논의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이는 곧 아직 대부분의 한전에서는 '1년1작' 식이 지배적이었고, 최열등지인 중북부와 산간지역에서는 아직도 휴한농법이 광범위하게 잔존하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

#### 4.2.2. 作付體系의 急速한 高度化

이러한 사정은 18세기로 들어서면서 변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이 시기에는 북부지방과 중부지방의 일부와 산간지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1년2작' 식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특히 삼남지방에서는 그 내용까지도 풍부하게 바뀌었다. 이미 麥의 후작으로 전부터 사용되던 대두와 소두(大小豆) 뿐 아니라, 피 모밀 菁根까지도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력소모 작물인 木花를 재배한 한전에서만 아직도 근경법이 보급되지 않았다. 또한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경법은 전국에서 보다 널리 확산되고 있었다.

그에 따라 당시 농서인 『增補山林經濟』에서는 농가에게는 상류층의 주식을 위한 벼농사

보다 일하는 사람의 주식(役夫之食)을 위한 밭농사가 더욱 중요하다며 권장하고 있었다 [김용섭(1974)]. 이제 한전에서조차 ‘麥 — 大小豆 및 粟’로 연결되는 ‘1년2작’의 발달된 작부체계를 갖추게 되었던 것이다.

19세기 전반기에는 근경법이 전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한전 작부체계로서 기반을 굳히고 있었다. 대두 소두 녹두 모밀 등 근경에만 사용되는 작물이 정착되었고, 또 수수 들깨 녹두 등의 수많은 작물들이 새로이 근경에 사용되었다. 그에 따라 이 시대에는 근경에 전혀 이용되지않는 작물은 맥을 수확하기 전에 파종해야 하는 작물인 목화 뿐이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라 할 정도였었다. 19세기의 대농학자 서유구는 근경의 전국적인 일반화를 지적하면서, 여름철에 있어 제초(夏鋤)와 排水의 어려움을 이 농법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의 근경법 발달은 보다 집약적인 한전 작부체계였던 간중법의 전개와 밀접한 상호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林和男(1980)]. 간중법은 재배기간이 중복되는 두 작물을 동일한 밭에 겹쳐서 재배하는 보다 집약적인 기술이었다. 이미 15세기 농서에 빈농층의 농법으로 소개된 이 유래깊은 농법은 17세기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부지방 빈농층을 중심으로만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간중법은 18세기에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19세기에는 근경보다 더욱 보편적인 작부체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간중법의 확산은 내한 및 내풍의 효과뿐 아니라 노동 공급이 원활하며, 같은 밭에다 두 작물을 적기 파종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간중법은 한 작물이 재해를 입더라도 다른 작물은 수확이 가능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근경으로서는 불가능한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간중이 급속히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간중의 경우도 지나친 집약화로 인한 지력고갈이 그 주요한 문제점이었는데, 당시의 발달한 시비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었다.

이와 같은 작부체계의 고도화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이는 시장에 자극을 받은 농민들에 의한 상업적 농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중요한 섬유작물인 목화, 연초 생강 등의 기호작물, 대소두와 대소맥 등의 상업작물, 그리고 온갖 김장용 채소들이 이렇게 대량 생산되어 시장으로 팔려나갔다. 이제 한전농업은 시장과 결합되어 보다 높은 단계의 상품생산을 추구하였으며, 소농민층에게 적지않은 이익을 안겨다 주었다. 그 때문에 근경과 간중은 서로 깊게 결합함으로써 각 지역의 농업환경에 알맞는 독특한 윤작체계를 이루었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면, 이렇게 고도화된 작부체계가 중남부 지방의 ‘2년4작’ 식, 서북부 지방의 ‘2년3작’ 식 작부체제로 정착하였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이 발달된 작부체

계는 더욱 상업적 농업을 촉진하였으며, 아울러 시장에 자극받은 한전농업은 더욱 집약적인 작부체계를 만들어 갔다.

### 4.3. 施肥法과 農具의 發達

#### 4.3.1. 施肥技術의 高度化

조선후기의 농업발전은 시비법에 의해 뒷받침될 때에만 가능하였다. 먼저 비료와 시비법의 발달을 살펴보자. 조선전기에는 비료의 절대부족으로, 열등지에 파종된 종자에만 시비하는 조방적인 시비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이호철(1990)]. 이러한 조방적인 시비법은 17세기 초의 농서 『농가월령』에서부터 그 한계가 깨뜨려졌다.

17세기에 이르면, 조선전기에는 예외적이었던 廐肥의 시비가 발달했을 뿐 아니라, 벼농사의 경우 이양법의 보급으로 못자리(秧基)를 위한 새로운 비료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1년2작'을 위한 필수적인 麥田에의 시비법도 이 때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의 농서 『千一錄』의 단계부터 조선후기의 시비법은 급속하게 발전하여, 구비생산이 보편화되고 비료가 다양화하였을 뿐 아니라, 농지전체에 시비하는 糞田法이 시작되었다. 이외에도 비료만들기(造肥)와 추가비료(追肥)의 시비가 일반화되었으며, 다비농업의 모습을 보이는 중요한 단서들이 이미 만들어졌다.

이러한 소농민경영을 위한 집약적인 시비법은 19세기의 대농학자, 서유구가 그의 농서에서 '貯糞六道'라는 말로서 상업적인 '부농경영'의 시비법을 적극 제시하였다는 점과 대비되는 것이다. 특히 '적은 비용으로 많은 비료를 획득한다'(小肥大得)는 그의 경영지침은 바로 비료를 구입하는 대규모 농업경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남부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금비의 매매가 보편화되지 않았다[김용섭(1974)].

#### 4.3.2. 쟁기와 호미의 定着

다음으로 쟁기질과 제초작업의 발달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조선전기에서는 쟁기질은 아직 조방적이었고, 쟁기도 소농이 갖추기 어려운 무거운 대형의 것이 일반적이었다. 제초작업의 경우도 자루가 긴 호미(長柄鋤)로 겨우 1~2회 정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세기 초의 『농가월령』에서부터 쟁기는 중형 소형으로 분화되었다. 쟁기질에서도 벧<sup>(15)</sup>이 있는 쟁기로 농지전체를 가는 全面耕이 구사되었고, 인력농구의 발달로 熟治作業이 보다 철저해졌다. 그렇지만 18세기 초까지는 이와 같은 조방적인 제초방식이 계속되

(15) 벧(鋤)은 일반적으로 '쟁기의 귀'라고도 불린 쟁기의 부품이다. 『농가월령』의 '備農器'편에서는 이를 犁口라고 부르고 있었다. 벧이 장착된 쟁기만이 兩側發土耕이 아닌 전면反轉耕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 쟁기질과 제초작업에 노동이 집중 투입되는 한국 특유의 집약적인 농법이 완성되었다. 먼저 『해동농서』에는 ‘東犁’라는 한국형 쟁기를 소개하였으며, 全面反轉耕을 반복하는 집약적인 경법이 출현하였다. 농민 혼자서도 쟁기질을 할 수 있는 소규모 쟁기도 널리 보급되어 근경과 간종 등 집약농업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또한, 제초작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자루가 길었던 종래의 호미 대신, 자루가 짧은 호미가 출현하여 매우 섬세한 집약적인 농사작업이 이뤄졌다. 특히 『천일록』에서는 代優法이라는 ‘자루가 짧은 호미’(短柄鋤)를 섬세하게 이용하여 토지생산성을 크게 높이는 방법을 소개하였다(이호철(1986, 제5장 鋤地法, pp.178-179)).

19세기에 이르면, 이러한 한국형의 쟁기와 호미는 완전히 정착되었다. 즉, 토지생산성에 기초한 집약농법이 농구에서도 완성된 것이다. 특히 이는 좁은 토지를 집약적인 노동 투입으로 경작하기 위한, 소형의 쟁기와 자루가 짧은 호미로 대표되는 집약적 생산방식이 완전히 정착하였음을 의미한다.

## 5. 商品流通과 商人資本의 蓄積

### 5.1. 商品流通의 發達

#### 5.1.1. 새로운 都市 商業體系의 成立

조선후기의 상품유통은 도시와 농촌으로 일단 나뉘 살펴볼 수 있다. 서구의 도시와는 달리 한국의 중세도시는 단지 정치 행정의 중심지였을 뿐 경제도시가 아니었다는 낮은 학술에도 불구하고, 지역 시장권에 뒷받침된 京市와 鄕市가 발달된 상업체계를 통하여 발전해왔음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경향은 특히 서울 개성 평양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가장 큰 상업도시였던 서울은 水上 및 海上 교통의 편의 때문에 그 외곽지대인 京江 浦口에 새로운 유통거점을 둔 私商體系가 발달하였다(Ko(1993)). 특히 17세기 이후의 인구집중과 도시발달은 점차 상업지역을 확대시켜 浦口들을 거점으로 한 전국적인 해로유통권이 성립되었다. 특히 전국적인 상품인 쌀을 위시하여 모든 조세와 화물이 집하되었던 이곳에서 시전을 중심으로 한 독점적 상업체계가 붕괴되고 경쟁적인 영업체계가 정착하였다. 그후, 荷役業 및 운수업, 그리고 생선장사들에게 얼음을 공급하는 藏氷業 등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 끝에 京江主人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상체계가 확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강경이나 통영과 같은 새로운 상업도시도 적지않게 출현하였다. 이외에도 한약재만을 취급하는 특수시장인 대구의 藥令市는 중세 서유럽의 大市(Messe)에 비견될 정도의 큰 규모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다[권병탁(1985)].

### 5.1.2. 農村市場網의 全國的인 成立

한편 농촌의 상품유통은 場市가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특히 15세기 초에 전라도에서 발생하여 전라도와 충청, 경상도로 확산된 장시는 17세기부터는 오지에까지 개설되어 매월 3~6회씩 정기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18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장시는 비록 양적인 증가를 보였지만, 여전히 고립 분산적으로 존재하였다.

장시가 급격한 양적인 증가와 발달을 보임과 동시에 장과 장 사이에 유기적인 연계관계가 형성된 것은 바로 1730~1740년대였다. 그리하여 이제 매월 6회의 5일장 체계가 정착되었으며, 그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매일 장이 열리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장시의 발달을 배경으로 기존의 상업체계에 대항하는 새로운 私商層이 등장하였다. 또, 국가도 이를 인정하고, 종래 현물로 거두던 장세를 화폐로 징수하였다.

1770년에 1,064개소였던 장시는 19세기로 가면서 그 숫자가 오히려 줄어 들었다. 그러나, 19세기 경제침체설의 주요 논거였던 이 자료의 분석결과가 오히려 장시발달 현상을 의미한다는 점은 오히려 역설적이다. 장시수의 감소는 장시가 밀집한 지역일수록 많았다. 상업이 가장 발달한 곳일수록 폐지된 장시가 많았고, 상업발달이 늦은 곳은 아무런 변동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곧 장시의 질적인 발전과정에서 나타나는 매우 당연한 현상이었다. 즉, 1830년대에는 크게 발달한 큰 장(大場)들이 주변의 무수한 작은 장들을 흡수해 들었기 때문에, 장시수의 감소가 나타난 것이었다. 이처럼 장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를 지나면서, 수적인 증가 추세에서 '장시규모의 확대'라는 질적인 변동을 이룩하였다 [한상권(1981)].

특히 이러한 장시의 전국적인 발달은 바로 조선후기 농업발달의 결과물이었다. 또한, 이는 특권적 市廛商人이 해체되고 私商이 등장하게 되는 도시상업 발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또한 17세기부터 지방장시의 상설점포들은 점차 상업중심지나 상업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결국, 장시는 19세기 전반기에는 지역 시장권을 형성하였으며, 그 후반에는 전국적 시장망을 이루었다.

## 5.2. 商人과 商人資本의 發達

### 5.2.1. 朝鮮後期 商人層의 構造變化

먼저 시전상인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서울 개성 평양 등의 대도시에서 상설점포를 가

지고 상업활동을 한 도시상인을 지칭한다. 특히 서울에서 활동한 六矣廛은 내부적인 길드(guild) 조직을 바탕으로 관청의需用에 응하였으며, 그 대가로 禁亂廛權이란 독점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들은 상업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업원료와 상품을 매점하거나 판로를 봉쇄하여 소비자와 수공업자를 격리하였다. 특히 19세기에 이르면, 시전상인들은 수공업자를 고용하여 수공업을 경영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는 시전상인의 이러한 특권이 새로운 私商層에 의해 해소되는, 이른바 反都賈 현상이 본격화되었다[강만길(1973)]. 사상층들의 이러한 도전이 가능해진 것은 낡은 특권에만 의존한 시전상인을 자본력과 조직망에서 앞섰기 때문이었다. 특히 서울 주변인 京江 지역에도 유리한 유통거점을 확보한 경강상인들은 18세기 후반부터 ‘船商-旅客主人-市廛-中賭兒-行商-消費者’란 유통체계에서 ‘시전을 뺏’, 새로운 상품 유통체계(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Ko(1993)]. 그 밖에도 자유 수공업자들이 시전상인들의 지배를 벗고 그들의 수제품을 직접 판매해 나갔으며, 자유시장인 ‘亂廛’도 성립하였다. 이처럼 시전을 대체한 새로운 상인층의 출현은 이 시대 상업발달의 중요한 국면이었다.

다음으로 貢人에 대해 살펴보자. 대표적인 어용상인(官商)인 공인은 대동법 실시에 따라 대가를 받고 貢物을 구입하여 관청에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남겼다[유원동(1983)]. 특히 공인권은 점차 개인에 집중되어 갔을 뿐 아니라, 소유권과는 별개로 ‘分主人權’이란 경영권이 독립되었다. 상인층들은 그들의 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투어 공인권에 투자하였다. 그러나 공물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貢價를 받으려던 낡은 상인들은 18세기 이후 대부분 도태되었지만, 상품생산과 그 유통에 주력한 새로운 상인들은 이를 통해 계속 성장하였다. 특히 19세기에는 새로운 공인권이 거의 창설되지 않았다. 이는 곧 상업의 새로운 발달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로 ‘주인권’을 가진 상인들을 살펴보자[Ko(1993, pp. 211-223)]. 대동법의 실시 이후 구래의 사주인은 客商主人 稅穀主人 船主人 旅客主人 등으로 분화되었다. 객상주인은 화물을 신고 온 客商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상품을 대신 거래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 세곡주인도 조세곡이나 공물을 신고 도착한 外방선인들을 접대하고 이의 하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살아갔던 상인층이었다. 또 선주인은 江에서 선인들을 접대하고 그 대가를 받은 상인층이었다. 이러한 주인권은 사유재산권으로서 자유롭게 매매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의 보장이 매우 절실했다.

한편, 17세기 후반에 마포에서 처음 등장하여 선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여각은, 18세기부터 모든 주인권들을 통합하여 장악하였다. 그러나, 아직 시전에 속하였던 여각주인은

18세기 후반부터 '경강주인'이란 이름으로 지역주인권을 장악하였다. 상품유통을 장악한 이들은 점차 시전상인을 배제하는 운동을 본격화하였으며, 마침내 새로운 유통체계를 장악하였다. 19세기 이후 '경강주인'은 상품유통의 시기와 양을 조절하면서 가격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는 都賣 행위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그러나 여각주인층은 물품 종류별로 주인층이 달랐으므로 '상품유통'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고, 상호간의 경쟁도 치열하였다.

끝으로 보부상은 상품을 보자기에 싸서 운반한 '벗집장사'인 褌商과 이를 지게에 지고 운반한 '등집장사'인 負商을 통칭하는 명칭이다[유원동(1984, pp.180-213)]. 이들은 각각 견고한 상인조합(peddlers guild)을 형성하여, 장날을 따라 농촌장사를 차례로 행상하였다. 특히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시장에 따라 이들은 각각 독특한 상품을 취급하였는데, 농촌지역을 무대로 교환경제의 최말단에서 교환경제를 매개하였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상인은 市塵商人, 貢人, 客主와 旅閣主人, 褌負商으로 나누어졌다. 무엇보다 이는 객상들을 위해 상품유통의 중계자로서 처음 출현한 여각주인이 중간수탈자로 변신하여, 마침내 시전체제를 누르고 '독점의 실현자'로서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으로 집약된다. 그러나, 사상체계를 합법화한 18세기말의 '辛亥通共' 이후에는 상품유통에까지 국가권력이 개입하였다. 더구나 급속한 발전을 보였던 농촌의 경우와 달리 사상의 주체세력도 독점적으로 변질되었다. 이처럼 새로운 근대적 상업으로 이행해가는 전과정은 직선적이기보다 매우 우회적이었다.

### 5.2.2. 商人資本의 發達

조선후기의 상업자본은 과연 얼마나 축적되었던가. 특히 식민지화 때문에 산업자본으로의 전화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는 상인자본이 얼마나 선대제(putting-out system)나 수공업 지배를 실현하였는가에 대한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

그러나 신흥상인들에 의한 다양한 도고상업과 대외무역이 가능했던 당시에 있어 상업자본의 축적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서 '객주 및 여각'과 '경강상인' '개성상인' 등의 상업 자본가들의 화폐재산 축적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였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의 상인자본 축적은 적지않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18세기 말 이후 새로운 상인들이 장악한 새로운 유통체제는 정치권력의 침탈에 견딜 수 없는 불안정성을 배제할 수 없었으며, 특히 19세기 전반의 '세도정치'로 인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상업자본 축적을 크게 제약하였다. 그러한 상업자본 축적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가중은 이후의 자본축적을 저해함으로써 개항이후 침투해 온 외래자본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하나의 중요한 요인을

이루었다[Ko(1993)].

한편, 조선후기 상업자본은 단지 전기적 자본으로서만 머물지 않고, 수공업을 통한 생산자 지배를 실현하였다. 특히 수공업자(工匠)를 고용하여 상품을 생산하는 시전의 새로운 상업형태가 19세기에는 일반적이었다. 특히鑄錢의 경우에는, 상인이 특권 매뉴팩처(manufacture)를 형성하여 ‘공장제 수공업’을 경영하였다. 또한 分院의 도자기업과 製紙業 등에서 상인物主가 자본을 통해 생산을 지배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송찬식(1973)]. 또, 수공업자가 상인을 兼하는 등 여러 유형들이 전개되었다.

결국 이와 같이 사례들은 자본축적에 대한 전근대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상인자본들이 ‘선대제 수공업’이나 ‘공장제 수공업’과 같은 다양한 유형으로 轉化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5.3. 貨幣經濟의 擴大

위와 같은 조선후기의 상품유통은 銅錢이란 금속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졌다. 비록 오랜 역사적 경험이 있었지만, 17세기 후반부터 새로 정착된 화폐경제는 농촌에서부터 변화를 가속시켰다. 화폐경제는 ‘동전유통 보급기’(17세기), ‘동전유통에 대한 반동기’(1700~1730), ‘화폐경제 현실화 모색기’(1730~1810), ‘동전유통 활발기’(1810~1860), 그리고 ‘동전유통 혼란기’(1860~1890)라는 4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원유한(1975)].

18세기에도 동전鑄造사업은 계속되었다. 특히 18세기 전반은 동전이 널리 통용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는데 비해, 후반의 화폐정책은 그로부터 야기된 제반 폐단을 억제하기 위해 동전주조와 유통을 통제하였다. 이는 화폐경제가 농촌 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하여 적지않은 문제를 일으켰음을 반증해준다. 이러한 혼란들은 화폐경제가 지배적인 대세로 확산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특히 당시에는 급증하는 화폐수요 때문에, ‘錢荒’ ‘錢貴’ 등의 화폐품귀 현상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동전유통에 대한 실학자들의 여러 화폐경제 사상 가운데서, 정약용의 근대적 화폐제도 구상은 1880년대에 이르러 ‘개화파의 화폐정책’으로 결실되었다. 그러나 이는 1860년대에 대원군의 ‘당백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후 일제의 일본화폐의 무제한적인 유입이란 상황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동전화폐는 발달한 농업의 생산물을 소비자로 연결하는 상품유통의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기능하였다.

## 6. 近代社會를 向하여

### 6. 1. 近代的 階級の 形成

#### 6.1.1. 階級變動의 數量的 把握

조선총독부가 파악한 1910년경의 직업별 인구는 관리(0.5%), 양반(1.9%), 유생(0.7%), 상업(0.7%), 농업(84.1%), 공업(0.8%), 광업(0.1%), 日雇(2.4%), 기타(2.3%)로 구성되었다. 이를 보면, 관리 양반 유생과 같은 지배계급이 약 3.1%에 불과하고, 85%에 이르는 인구가 농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관리 양반 및 유생들은 대개 지주층이었으며, 농민들 가운데 다수는 소작농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농민들은 農莊主에 예속되어 부역노동을 제공한 조선전기의 경우와는 달리, 봉건적 소작농이 아니라 지대를 제한 나머지를 시장에 파는 독립된 소생산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자료 속에는 비록 적었지만 상업 공업 광업 일고 등의 새로운 근대적 계층이 드러나고 있다.<sup>(16)</sup> 이는 곧 조선후기 전기간 동안 급속하게 진행된 계급변동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이 시대 계급변동의 또 다른 측면은 ‘신분제 변동’이란 말로 집약되고 있다. 이미 1938년에 대구부 호적에 대한 한 고전적 연구[四方博(1938)]는 이 지역의 계급구성이 1690년에 양반, 상민, 노비호가 각각 9.2%, 53.7%, 37.1%였던 상태에서 1858년에는 양반, 상민, 노비호가 70.3%, 28.2%, 1.5%로 구성되는 상태로 역전되었음을 밝혔다. 그후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지역(산음 상주 울산 언양)의 호적대장(帳籍)을 여러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도 ‘양반호의 증가’ ‘양인호의 상대적 감소’ ‘노비층의 소멸과 도망’이라는 흐름에 일치하였다. 이는 곧 조선사회를 지탱해온 중요한 기둥인 신분제가 여지없이 변동되었음이 노출되었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는 적지않은 반론이 있다. 이들은 ‘수많은 職役들에 대한 신분배정의 원칙조차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치적으로만 신분변동을 논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비록 상당한 변동이 있었지만, 신분제에 기초한 계급구조는 신분제가 법적으로 해체된 1894년까지 그 기본골격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신분제도가 격심하게 변동하였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신분하강과 보수화 현상이 지배적이었던 17세기와는 달리, 18세기 이후는 신분으로 표현된 계급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지배계급의 보수화로 인한 계급갈등이 사회문제로 크게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16) 1910년은 이 근대적 계층들이 ‘식민지화’란 물리적 조건 때문에 그 기세가 꺾인 시점이었다.

### 6.1.2. 兩班階級の 變化

조선사회는 '양반'이란 지배층이 양인과 천민을 지배하는 신분사회였다.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지주였고, 정치적으로는 관료나 관료 예비군이었고, 사회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지배자였다. 그들은 양인과 천민을 소작농으로 지배하면서, 교육을 독점하여 스스로를 재생산하였다.

그러나, '양반호의 급속한 증가'는 농업과 상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하층신분이 성장해간 결과였다. 특히 경제력을 확보한 新鄕층은 지역사회의 지배권을 놓고 구래의 양반인 舊鄕층에 도전하였다. 신향층은 향리 중인 서얼 등을 포괄하고 있었지만, 그 주류는 조선 후기에서 경제력을 확보한 부농층이었다. 이들은 納粟 願納 등을 통하여 점차 하급양반으로 성장하였다. 특히, 행정실무를 담당한 이들은 점차 향권을 장악해나갔지만, 때로는 그에 만족하지않고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치로 진출하려 하였다[정석중 (1983, pp.94-130)].

신구 향족들간의 '鄕戰'은 구양반들의 지방자치 기구(鄕約, 유향소)가 약화되고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방수령과 결탁한 신향들이 향임직을 장악해 가자, 사태는 점차 구래의 재지사족에게 불리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구향들은 門契를 강화하고, 동족부락을 형성하여 그들의 신분제적 지배를 유지하려 하였다. 그렇지만, 이미 이들 가운데는 대지주 및 중소지주층뿐 아니라, 상당수는 직접노동을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자작농과 소작농, 심지어 노동자까지 존재하였다. 신분제적인 권위와 경제적인 능력은 분리되었으며, 피지배층의 신분에 대한 도전은 점차 도를 더해갔다.

이처럼 지배신분의 변동은 경제적으로 성장한 피지배층이 양반신분으로 진출함으로써 발생하였다. 이제, 크게 늘어난 양반층은 새롭게 성장한 신향층과 뒤섞여 점차 평범한 신분으로 변해갔다. 그 결과 신분에 의한 지역사회의 주도권은 차츰 상실되었다.

### 6.1.3. 減少하는 良人和 奴婢

먼저, 양인층은 정해진 세금 외에도 토산물을 貢納하고, 軍役과 賦役의 부담자였던 봉건적 예속농민이었다. 그러나 농민층의 분해가 진행되면서, 그 대부분은 지주의 토지를 병작하는 대가로 지대를 바치는 소작농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상업적 농업에 편승하여 경제적 부를 축적한 부농층이나 지주로 성장한 층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인신분들은 모든 호적에서 감소하고 중인과 양반신분으로 상승해 갔는데, 이는 그들의 경제적 처지의 변동과 깊은 상관이 있다. 특히 양인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납속, 족보위조(僞普), 족보매매 등의 방식으로 호적에 기재된 신분을 위조한 증

거는 수없이 발견된다[윤희면(1990, pp.62-82)]. 물론 직역을 바꾼 양인들이 모두 양반과 똑같이 행세할 수는 없었지만, 신항층이 된 계층들은 지역사회 지배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양안과 호적이 함께 남아있는 18세기 상주지방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김용섭(1971, p.80)]. 이곳 양인호 201호 가운데서, 신분을 바꾼 호는 모두 68.7%인 138호였다. 이 138호 가운데서 양반으로 바꾼 경우는 131호였고, 나머지는 천민으로 바꾼 경우였다. 이렇게 양반으로 직역을 바꾼 호들은 그렇지 못한 호보다 토지를 더욱 많이 소유하였고, 이들 중에서 상공업에 종사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노비의 감소는 주로 '도망'이란 수단을 통해 이뤄졌다. 신분제의 최하층에 위치한 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로 나누어 진다. 사노비는 主從關係에 의해 소유주 개인에 예속되었다. 17세기 이후 지주제가 일반적인 경제범주로 등장하자, 노비들도 전호로서 독립된 소경영을 이루었다. 그러한 생산양식의 변화는 발달한 상품화폐경제와 결합되어 노비층 가운데서도 경제적인 부를 바탕으로 신분상승을 꾀하는 층이 출현하였다. 상주양안의 경우, 노비에서 양인으로 상승한 23호의 소유면적은 오히려 양인층의 평균보다 많았을 정도였다.

사노비는 다시 솔거노비와 외거노비로 나누어지는데, 노비신분의 변동은 후자의 경우가 더욱 심하였다. 도망간 노비들은 그들 신분의 상승을 위해, 양인과 혼인하거나 성관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나갔다.<sup>(17)</sup>

한편, 공노비의 경우, 추쇄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신공정수조차 어려워진 조선정부는 1801년에는 內寺奴婢制 폐지를 단행하여 6만 6천명의 노비가 속량되었고, 곧이은 1894년에는 노비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었다. 이 충격은 노비제의 폐지에만 그치지 않고, 신분제를 바탕으로 한 중세적인 사회질서의 해체를 야기하였다. 결국 양인과 노비가 사라진 대신 대다수의 인구가 이름만으로 양반대열에 참가함으로써, 근대적인 새로운 계급사회를 열 수 있는 단서를 열었다. 이처럼, 조선후기 사회는 점차로 신분보다는 경제적 생산관계가 더욱 중시되는 새로운 사회로 발돋움해 갔던 것이다.

## 6.2. 都市의 急速한 膨脹

### 6.2.1. 朝鮮後期の 都市人口

조선후기 사회 가운데서 도시는 가장 급격한 변화를 겪은 곳이었다. 먼저, 『戶口總數』를 통하여, 1789년경의 도시인구를 살펴보자. 대략 20만 정도의 인구를 가졌던 서울<sup>(18)</sup>을

(17) 이준구(1993, p.251)에 의하면, 17세기에는 노비들이 전혀 성관을 취득하지 못하다가, 18세기 후반에는 전체의 1/3을 넘는 노비호가 성관을 취득하였다고 한다.



위시하여, 적지않은 지방도시들도 상당한 인구를 가졌다. 평양과 개성은 3만명, 전주와 상주는 2만명이 넘는 인구를 유지하였다. 그 밖에도 공주, 충주, 나주, 대구, 진주, 부산, 경주, 해주, 의주, 영유, 위원 등의 11개 도시는 1만명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도시적 면모를 갖추었던 도시들은 모두가 교통이 편리한 유통 중심지에 위치하였다.

한편, 상공업이 발달하여 농촌지역이 도시로 발전해간 신흥 중소도시들도 적지않았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江景, 마산, 원산 등의 해상 교통중심지와, 안성 등의 육상교통 중심지였다. 이 곳은 교통운송이 편리한 포구이거나, 육로가 교차하는 지역에 위치하였다. 특히 강경의 경우는 漕運을 바탕으로 한 전국적인 포구유통망이 형성된 결과였다.

새롭게 부상한 도시지역의 발달된 상공업 활동은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는 농업생산력의 발달 때문에 농촌에서 밀려난 농민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결국, 예전의 행정도시들이 경제도시로서 새롭게 발달하고, 새로운 신흥도시들이 출현하게 된 배경은 도시인구의 팽창보다는 농촌의 유입인구가 늘어난 때문이었다. 이들은 성장하고 있었던 수공업과 근교농업 등의 각종 생산부문과 토목공사에 고용되었을 뿐 아니라, 상업을 중심으로 한 각종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시인구의 팽창현상은 구조적 변화를 겪던 농촌과 도시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던 셈이다.

### 6.2.2. 經濟都市의 出現

본래 한국의 도시는 집권적인 국가권력의 집단적 거주지였다. 특히 지방도시는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이 머무는 곳이었고, 유럽과 같은 의미의 '시민계급의 자치'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도시는 농촌을 지배하는 거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행정인의 도시'는 상품 화폐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17세기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농촌장시가 발달한 18-19세기부터는 아직 행정중심지로만 기능했던 감영 소재지<sup>(18)</sup>들은 새 상공업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이와는 달리, 장시의 발달과 맞물려 유통의 중심지가 신흥도시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 가운데서 상품유통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도시'와 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산도시'가 분화되었다.

특히 전국의 유통망은 서울 평양 등의 대도시 시장, 중소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농촌시장, 그리고 각종의 물화를 수송하는 거점이었던 여러 포구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또한,

(18) 서울인구는 19세기에 대략 20만명이 유지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통적인 성곽 안의 도시인구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마포 용산 서강을 포함하는 전체 서울지역의 인구는 30만에 가까웠을 것이며, 이는 역시 19세기에도 끊임없는 증가가 이뤄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19) 평양, 전주, 대구 등이 대표적이다.

생산도시들도 놇그릇(鑪器) 생산은 '경기도 안성과 평안도 남청', 漆器는 '경상도 통영' 등으로 지역간 특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18세기 이후부터는 수공업 생산지인 店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전국적인 도시발달 현상은 독자적인 것이기보다, 농업생산력과 농촌장시의 발달에서 비롯되었다. 농촌장시의 고립된 상품유통은 점차 지방도시를 핵으로 한 상품유통권을 이루게 되고, 포구를 중심으로 한 시장권과도 연결됨으로써 마침내 서울을 중심으로한 전국적인 유통망이 완성되었다. 이제 행정 중심지에 불과하였던 지난날의 서울은 전국적인 경제 중심지가 되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이자 가장 큰 상업도시로서, 한강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경제권<sup>(20)</sup>을 형성하였다.

이제 지역적 분업과 농업특화를 통해 생산된 전국의 상품들이 서울로 집중되었고, 서울은 이를 다시 전국 각지로 분배하고 파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이 18세기 이후 경제도시로 서울이 부상해가는 과정은 바로 농촌에서 탈출한 새로운 주민들이 점차 신분제적 구속에서 벗어나 근대적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과 일치하였다.

### 6.2.3. 서울人口의 近代的 變化

막스 베버(Max Weber)가 지칭한 전형적인 '동양의 도시'란 개념은 17세기 이후 경제도시로서 새롭게 발달해간 서울을 설명하는 데 있어 알맞지 않은 선입견에 불과하다. 1648년에 10천호, 9만 5천명 정도의 규모였던 서울인구는 1868년에는 45천호, 21만명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증가 추세는 11만명 선으로 동결된 성안 인구보다 주로 성밖 인구가 늘어난 결과였으며, 이는 곧 농촌으로부터의 수많은 유입민들이 성밖에 정착한 결과였다. 서울의 인구밀도는 평방 킬로미터(km<sup>2</sup>)당 약 5,200명이었는데, 이는 같은 시기 전국평균보다는 160배 이상 높았을 뿐 아니라 대구 1,400명, 평양 3,360명, 함흥 2,281명, 개성 1,985명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이 높은 인구밀도는 곧 서울로 상징되는 도시생활의 주요한 특징이었다.

조선후기 들어 서울시민의 구성은 근대적 모습으로 크게 바뀌었다. 1663년의 북부지역 호적과 20세기 초(1903년, 1906년)의 그것을 비교해보면, 이러한 변화는 보다 구체적으

(20) 서울을 중심으로 한 京江지역은 서울의 상업도시로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발전을 거듭하였다. 이 경강지역은 마포, 용산, 서강지역을 기본으로 점차 三江, 五江, 八江으로 지역권을 확대해 나갔다. 특히 18세기 이후 서울의 발달은 경강을 중심으로 한 수운업 발달의 결과였다는 점에서 포구 시장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경제권의 발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8세기 경강지역의 인구는 3만명이 넘었기 때문에 유통인구와 누락인구를 포함한 실제인구는 10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로 파악된다[조성윤(1992)]. 전자의 경우, 서울은 상공업이 발달되지 못한채, 왕실과 사대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배집단과 관청의 하급관리와 상인, 수공업자, 농어민, 하인과 노비로 구성되었다. 특히 10% 미만의 양반계급에 75%의 노비가 종속된 당시 서울의 생활상은 중세적 경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후 농촌으로부터의 전입인구가 점차 정착해나감에 따라, 서울은 점차 상공업적 성격을 추가해 갔다. 늘어난 상인과 수공업자 집단은 다시 거대한 자본을 축적한 富商과 대수공업자뿐 아니라, 소상공, 중소수공업자, 그리고, 각종 수공업과 하역, 토목공사에 고용되는 임노동자층 등으로 분화되었다. 마침내는 일부 양반들마저 지주경영 외에 상공업과 고리대업에 적극 참여했지만, 많은 양반들이 몰락하여 도시 하층민으로 편입되었다. 또한 기술관료와 하급관료로 구성된 중인층이 18세기 이후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여, 독특한 그들 나름의 문화와 정치의식을 형성하면서 開化思想을 예비하고 있었다.

### 6.3. 閉鎖的인 教育의 變化

#### 6.3.1. 國家的 教育機關의 變化

조선시대의 교육제도는 독자적인 교육체제를 통해 관료예비군 교육을 독점하려는 국가와 이에 대항하여 서원과 서당을 중심으로 한 나름대로의 교육제도를 정비해간 양반층 간의 관계에서 파악된다[이병휴(1975)]. 이를 통하여 지배계급인 양반층은 스스로를 재생산하고, 그러한 지배체제를 세습하였다.

그러나 조선후기의 사회변동은 이러한 교육에까지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최고의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은 1895년에 이르러서야 역사 지리 세계사 세계지리 및 수학 등의 교과목이 추가되는 느린 변화를 보였다. 그렇지만,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격변 속에서 성균관 유생들은 사회운동(空館, 捲堂)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편 유교를 지방으로 확산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향교의 운영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구래의 양반의 손을 떠나 점차 경제적 부를 축적해간 새로운 신향, 토호층의 수중에 놓여지게 되었다[김용덕(1983)]. 특히 새로 부를 축적한 이 새로운 층들은 관아의 실권을 잡은 향리들과 합세하여 기존의 지배세력을 배제하였다. 그 때문에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보다 돈을 받고 願納敎生들을 교안에 올려 경제적 능력을 갖춘 하층신분을 중인 및 양반으로 신분을 높이기 위한 사당다리로 점차 변해갔다[최영호(1984)].

결국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변화는 국가가 관인교육을 목표로 설립한 국가적 교육기관에도 적지않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앙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었던 성균관에서도 사회변

화에 따른 유생들의 시위와 교육내용의 개혁이 있었으며, 지방교육에서도 그에 따른 향교의 운영주체가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향교는 양반층만이 아닌 양반으로 변신하려는 낮은 신분층들의 교육기관으로 변해 갔는데, 그 결과 교육에 대한 양반들의 독점은 점차 깨뜨려졌다.

### 6.3.2. 私的인 教育機關의 變化

#### (1) 書院의 變化

조선후기의 사적 교육기관은 서원과 서당으로 대표된다. 서원은 대원군에 의해 철폐될 때까지 지방사족들의 대표적인 교육적 결집체였다. 그 때문에 서원은 재지 양반 사대부층의 기반형성에 구심적 기능을 담당하였다. 본래 양반교육과 주자학 강의(講學)를 목적으로 한 서원은 17세기부터 남설되면서, 명현의 제사를 모시는 데 주력하였다. 이러한 서원의 변질은 양반 사대부층의 경제기반 붕괴와 지주제 및 상품화폐 경제의 새로운 전개라는 조선후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한편, 조선후기의 서원은 본래의 경제기반보다는 정원을 넘어 뽑힌 額外院生과 서원촌 등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원생의 신분에도 영향을 미쳐, 양인신분이 서원의 원생으로 몰래 등록하는 일도 적지않았다. 이렇게 신분상승을 위해 돈을 바치고 원생이 된 계층들은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해간 상층의 양인층과 향촌 지식인들인 향리층이었다.

이와 같이 재지 양반 사대부층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서원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한편으로 그들의 약화된 사회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구심점으로 발전해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경제변동 속에서 부를 축적한 하층신분이 원생으로 참여함으로써 신분상승의 수단으로 변질하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양반층만이 독점하였던 서원교육이 하층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 (2) 庶民教育의 發達과 書堂

서당은 주로 초급교육을 담당한 사적 교육기관이었다. 주민 스스로가 마을단위로 설립한 시골학교인 서당은 소농 경제체제에 가장 알맞는 촌락 내부의 교육제도였다. 그 때문에 서당은 여러 차례 그 모습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발달해왔다. 양반교육을 위해 처음 출발한 서당은 조선후기에 이르러 '향촌서당', 또는 서민층만을 위한 '제3서당'과 같은 형태로 발전하였다가, 식민지 시대에 이르러 민족 저항적인 성격을 추가하였다.

조선후기의 양반서당은 본래 부계조상에 대한 제사의 기능이 추가될 정도로 폐쇄적이었다. 이른바, 18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동족부락이 서당설립을 주도하면서, 서당은 본래의

교육기능 외에도 향사기능까지를 포괄함으로써 부계 혈연중심의 폐쇄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러한 이지러진 모습은 ‘고용된 訓長들의 저항’과 같은 사회문제를 야기하였다.

폐쇄적인 양반중심의 서당교육이 사회통합적 기능을 상실하면서, 서당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신분제의 혼란 속에서 점차 마을의 중간층까지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마을단위의 洞約과 書堂契를 통한 경비조달이 일반화되었다. 이렇게 18세기 이후 새롭게 발전한 서당은 1910년 경에 무려 16,540개소나 존재하였는데, 이들은 저항적 민족 교육기관으로 변신하여 향후 독립의 기초를 마련하면서 근대교육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서당의 변화는 양반층만을 위한 ‘과거준비’란 처음의 폐쇄된 모습에서, 점차 교화적 및 국민교육적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 6.4. 實學思想과 西洋 科學思想의 만남

##### 6.4.1. 實學思想의 展開

조선후기는 ‘전근대의식에 대립하는 근대정신을, 물민족정신에 대립하는 민족정신’ [천관우(1967)]을 지향하는 실학이 새로운 개혁사상으로 전개된 시기였다. 17세기 초에 발생하여 유형원과 이익 등에 의해 발전해간 실학은 18세기말에 이르러 새로운 근대사상으로서의 면모를 분명히 하였다. 이른바 정약용,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최한기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학자군들은 주자학에 맞서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經世致用의 학문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실학자들은 중세적인 신분제의 철폐를 주창했을 뿐 아니라, 주자학적인 사회질서 속에서 어려움에 처한 民生을 구해나가려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사상으로서의 실학은 그들이 추구한 사회경제에 관한 사상 속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먼저, 실학자라면 누구든지 당시의 극단적으로 불균등한 토지소유와 경제의 주요기반이었던 농업의 개혁을 나름대로 구상하였다. 특히 고대의 公田制를 복원하여 토지소유의 불균등을 시정하려는 유형원과 소토지소유자의 몰락을 막기 위해 限田論을 제안한 이익의 사상은 마침내 공동노동에 기초한 공동농장제를 논한 정약용의 혁명적인 閭田論과 井田論으로 발전하였다.

한편, 박제는 종래 금기시되어왔던 ‘이윤추구를 정당화’하였고, ‘질약보다 생산과 유통을 장려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은 성장하고 있는 소상품생산자와 상공인들의 영업자유와 경제적 이익을 대변하여 특권상인들의 전근대적 독점을 배격하였다. 또한 실학자들은 광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수공업기술의 개량을 주장하였으며, 이율러 화폐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실학의 내재적인 전개는 한편으로 실학자들의 서

양과학에 대한 독창적 수용과정과 일치하였다.

#### 6.4.2. 西洋 科學思想과의 만남

아마 조선에 서양문물이 처음 도입된 것은 1631년에 鄭斗源이 명에서 한역된 서양과학서와 自鳴鍾 등을 얻어 왔을 때부터였을 것이다. 현실개혁을 모색하던 실학자들에게는 명말청초에 ‘마테오리치’를 비롯한 수많은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중국으로 수입된 이러한 새로운 과학지식은 매우 절실한 것이었다. 그들은 곧 이를 열심히 그들의 사상체계에 속해 소화해 갔으므로, 결국 서양과학은 당시 개혁사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서양과학이 실학에 미친 영향 가운데서, 특히 중요한 것은 바로 地球說이다. 지구설은 대실학자 이익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지구설은 당시 중국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학문의 관심을 자기 나라로 돌리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사상은 결국 내 것에 대한 관심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조선후기 실학 속에서 발견되는 내 것에 대한 일관된 관심(國學研究)은 바로 서양과학의 지구론에서 자극받은 것임이 틀림없다. 한편, 다산 정약용은 ‘技藝論’을 통하여 인간과 짐승을 구별하는 기준을 ‘기술’에 두었다. 이러한 그의 근대를 향한 사상적 짝은 ‘기술과 인간’, ‘기술과 사회경제’ 발전과의 관계를 논하는 데서 벗어나, 신기술의 도입문제까지를 논한 체계적인 과학기술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서양과학 사상의 수용은 독자적인 과학 사상이라고 평가할 만한 홍대용과 서양과학의 체계적 수용에 앞장섰던 19세기의 대표적 선각자 최한기의 사상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홍대용(1731~1783)은 지전설을 바탕으로 상대주의적 자연관을 제시함으로써 점차 중국 중심적 세계관을 부정하고 華娛論을 뛰어넘었다. 또한, 최한기(1803~1879)도 독특한 경험주의적 철학을 확립하였다. 특히, ‘선천적인 지식은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경험주의적 철학정신은 서양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소화해 낼 정신적 자세를 마련하였다.

서양 과학사상의 수용은 대학자들의 개인적인 노력보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사회경제적 조건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 때문에, 비슷한 사회경제적인 조건을 가진 중국 및 일본의 경우를 함께 견주어보면, 세 나라에서 서양과학을 수용한 계층들은 매우 달랐다. 일본에서 서양기술을 배운 사람들은 특권층이 아닌 서민들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노력으로 네델란드어를 익히고, 유럽과학을 일본에 수용하려 시도하였다. 중국에서는 17세기부터 서양과학 가운데서, 특히 천문학을 조직적으로 수용하였다. 이 때 예수회 선교사들로부터 천문학을 수용한 사람은 궁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이었는데, 그들은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매우 불충분하게 끝났던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서양과 만나게된 시기도 늦고, 그 수용방법에 있어서도 중국 및 일본과는 달리 처음부터

간접성을 유지해 왔다. 그나마, 권력에서 배제된 실학자들만이 대중과 유리된 채 개별적으로 서양과학을 수용하였을 뿐이었다.

#### 6.4.3. 實學思想과 西洋科學思想 受容의 限界

한국의 경우, 서양 과학사상은 이렇듯 사회적 모순을 개혁하려는 실학자들에 의해 적극 수용됨으로써, 그들의 관심을 국내의 자기문제로 돌리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그들은 기존의 사상인 성리학이 가지고 있던 관념성을 극복하고 과학적 세계관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7세기에서 19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양과학 서적을 접한 내용은 연행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추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 명말, 청초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다녀왔으나, 그들 가운데서 서양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실학자들이 서양과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이는 지식인사회에서조차 지배적인 태도가 되지 못하였다. 특히, 1801년의 '신유사옥'(천주교 탄압) 이후는 서양인에 대한 접촉도 억제되었기 때문에, 서양과학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결국, 서양과학에 대한 열성적인 탐구는 실학자들 사이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경향이였다. 실학자들은 그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서양 과학사상을 선택적으로 수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들은 근대화로의 발전 잠재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눈앞에 둔 1801년을 고비로 '학파로서의 실학'은 세도정치로 대변되는 보수반동의 물결 속에서 계속 발전하지 못하고, 개별적인 학자들의 서재 안에서 간신히 명맥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sup>(21)</sup> 그 때문에 가장 근대화에 도움을 줄 서양과학사상도 최한기 이후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단절될 수밖에 없었다.

## 7. 結論: '19世紀'를 어떻게 볼 것인가

### 7.1. '停滯'인가 '發展'인가?

순탄하였던 조선후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은 19세기로 들어서면서, 그 맥이 꺾인 것같이 보였다. 무엇보다 연평균 1%를 넘는 급속한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모든 사회발전의 활력이 함께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가뭄과 냉해'를 입은 19세기의 재해년에는 기근과 전염병이 온갖 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여기저기서 분출하기 시작한 농민

(21) 실학을 통해 서양과학 사상이 하나의 사상으로서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폐쇄당한 주요원인은 바로 '쇄국주의'와 '서학 탄압운동'을 들 수 있겠다.

반란도 이 시기를 견잡을 수 없는 혼란기로 만들었다.

그러나 19세기에도 ‘발전’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전체 농지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었으며, 그나마 많은 밭들이 논으로 바뀌어 농지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 비록 그 성장이 정체되었던 인구의 경우도 중북부 지방에서는 성장이 계속되었다. 수전농업이 크게 발전한 위에서, 한전농업의 고도화를 실현한 농업은 발달된 집약적 시비법을 바탕으로 소농민경영의 안정화를 이룩하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재해를 극복하였다. 그에 따라 1830년을 거치면서 질적인 비약을 실현한 상업은 지역시장권과 전국적 시장망을 실현하였으며, 이를 통해 축적된 상인자본은 수공업에까지 지배하였다. 한편, 근대사회를 향한 발걸음도 멈추지 않았다. 경제적으로 성장한 층들은 속속 양반신분을 획득하였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한편, 전국에서 성장해간 경제도시들은 농촌에서 밀려난 인구들을 유인하여, 독특한 도시문화와 정치의식을 형성해갔다. 이러한 와중에서 경제적 능력을 갖춘 층들은 지금까지 양반층에게만 독점되었던 교육기관에 참여하여 신분을 상승하였다.

이와 같은 발전적 모습 속에서 출현한 ‘인구정체’ 현상의 의미는 무엇일까. 당시 사회경제 발전의 기초는 시장에 근접하면서, 전국적인 특화가 실현된 농업경제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밀도가 높은 곳일수록 이러한 ‘정체’ 현상이 더욱 심하였다는 사실이다. 심지어 흥경래난(1811~1812)에서 1860년대 민란을 거쳐, 갑오 농민반란(1894)으로 이어지는 농민운동의 경우도 상공업과 상품 화폐경제가 가장 발달한 선진지역이 그 중심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코 19세기적 정체가 절대빈곤에서 빚어진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sup>(22)</sup>

그렇다고 해서 ‘19세기적 정체’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감소되지 않는다. 특히 정조의 죽음과 함께 등장한 노론일파의 ‘세도정치’는 심각한 제약이었다. ‘三政의 문란’이란 말로 대표되는 국가적 조세수탈은 농민경제를 압박하였고, 심지어 상인자본의 축적까지 방해했다. 개혁사상이었던 실학이 고작 복고적인 金石學으로 바뀔 정도로 사상과 종교에 대한 탄압은 혹심해졌다. 특히 서학탄압은 서양과학에 대한 연구와 토론을 봉쇄함으로써 보수적인 분위기가 온 나라를 풍미하였다. 그런 점에서 19세기적 정체의 본질은 국가와 ‘지배계급’의 위기였지만, 재정 수입원인 농지면적과 인구수조차 절반도 파악하지 못할 만큼 국가는 허약하였다. 이처럼 19세기의 한국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발전’과 ‘정체’가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22) 그 때문에 德川시대 일본의 경우처럼, 19세기의 인구정체는 ‘예방적 제한’의 결과였다고 생각된다.



## 7.2. 朝鮮後期 社會經濟 發展과 '19世紀'

19세기를 둘러싼 이러한 두 흐름은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무엇보다 '조선후기적 발전'에 대한 규명을 통해 얻어질 수 있을 것이다. 16세기에 처음 싹튼 이러한 발전은 17세기 이후 더욱 가속됨으로써,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그 정점에 도달하였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는 한국의 전역사에서 하나의 두드러진 역사발전 단계였다.

이 단계의 생산력적 토대는 곧 이앙법과 고도의 작부체계란 기술혁신을 완료한 농업이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높은 생산력은 소농민경영의 안정적인 자립화를 이룩하였다. '지주제'란 새로운 생산양식은 소농에게 경영자로서의 자율성을 부여하였을 뿐 아니라, 시장경제와 강한 親和力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가족에 알맞는 경영규모를 가지고 유리한 換金作物을 재배하여, 여유있는 생활을 향유하는 농민들이 여기저기서 출현하였다.

한편으로 '지주제와 수전농업'이란 변화는 지배이념으로 신유학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경제와 상업적 농업을 앞세운 실학사상이 싹튼 시기였다. 그리하여, 부계열의 직계가족 제도와 동족부락이 생기고, 시장과 상업적 농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이전의 그 어느 때와도 달랐다. 또한, 노비제가 소멸해갔을 뿐 아니라, 신분제와 경제적 능력이 혼돈되면서 신분제가 붕괴되어간 시대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銅錢화폐가 생활 속까지 침투하였고, 담배와 고추 등의 외래작물과 千里鏡 등의 서양문물이 도입되었다. 열등재인 稷나 粱 등이 사라지고, 麻 대신 면화가 중요한 섬유작물로 보급되었다. '김장'이 보편화되어 겨울철에도 채소(김치)를 먹게 되었고, 초급교육의 대중화로 '농서와 의서' '冊曆' '소설' 등이 널리 보급되고, 점차 지역단위의 놀이문화가 새로운 풍습으로 정착하였다. 양반층이 독점해왔던 예술과 문화가 서민들에게 제공되었고, 서울을 무대로 새로 싹트기 시작한 실학자들의 사회개혁 방안인 북학사상(이우성(1963))은 더욱 심화되어 마침내 개화사상으로 집목되었다. 춘향전과 같은 소설과 판소리를 즐기는 층이 날로 늘어났으며, 그리고 단원 김홍도등이 주창한 풍속화도 이러한 서민들의 애환을 그림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조선후기의 발전은 여러 면에서 도꾸카와(徳川)기 일본의 발전과 매우 유사하였다. 그렇지만, 에도(江戸)시대 농업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러한 '경제사회화 사이클'(cycle)도 실제로는 공업화 이전에 존재한 하나의 발전단계에 지나지 않았다[新保博 外(1989, pp.268-316), 速水融 外(1989)]. 그런 점에서 조선후기적 발전도 그 스스로가 자본주의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였다. 다만, 시장경제에 바탕한 이러한 발전양상은 밖에서 이식된 자본주의를 쉽게 수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지니고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서 시장에 연결된 집약농업의 강도높은 장시간 노동은 노동의 질을 높혀 공업화에 기여하였고, ‘교육을 통한 계급상승’의 경험이 낳은 높은 교육 열은 노동의 질을 크게 개선하였다. 하나의 독자적인 발전단계였던 조선후기가 정체기를 맞은 ‘19세기’는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새 문명을 위한 준비기’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른바 ‘19세기적 정체’는 지주제적인 생산양식<sup>(23)</sup>과 그에 기반한 조선국가의 위기였으나 이러한 지배계급의 위기는 다수의 피지배계급에게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발전단계로의 이행기’였던 19세기는 새로운 생산력과 기술을 향한 발전가능성과 고도의 ‘인구압력’이 축적된 시기였다. 축적된 ‘민중의 힘’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게 ‘밑으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해왔으며, 이러한 축적된 발전역량을 바탕으로 더 높은 사회로의 도약을 이끌 ‘위로부터의 개혁’은 매우 절실한 과제였다. 그러나, 능력을 상실한 국가권력은 끝내 본질적인 해결책을 이끌지 못하였다.<sup>(24)</sup> 더구나 서구세력의 침략에 직면한 당시에 있어서는 이러한 지배층의 위기는 결국 국가와 민족 전체의 위기로 전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아직 19세기 후반의 한국에서 개화파가 갖는 역사적 의미는 결코 작지 않았다. ‘갑신정변’(1884)의 실패는 외세의 압력과 내부적 개혁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정치권력만 남기게 됨으로써, 한국은 끝내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선후기의 발전은 해방후 한국의 공업화 성공에 엄청난 유산으로 작용하였다.

慶北大學校 農業經濟學科 教授

702-701 대구시 북구 산격동 1370

전화: (053)950-5767

팩시: (053)950-6773

## 參 考 文 獻

강만길(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발달』, 고대출판사.

권병탁(1985): “18세기 약령시 발전의 배경,” 『사회과학』 51. 1.

(23) 현존하는 개항직전의 지주경영에 대한 몇몇 사례들은 모두 지주제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였음을 보여준다. 당시 지주들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자작면적을 확대하거나, 소작농에 대한 수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24) 1860년대의 대원군의 개혁정책이 갖는 의미는 그런 점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 김용덕(1983): “조선후기의 향교연구,” 『한국사학』 5.
- 김용섭(1971): 『조선후기농업사연구』 1.  
 \_\_\_\_\_(1974): 『朝鮮後期農業史研究』 2.
- 민성기(1982): “조선후기 한전 윤작농법의 전개,” 『부대사학』 6.
- 박홍수(1967): “이조척도의 연구,” 『대동문화연구』 4.
- 송찬식(1973): “조선후기 상업자본의 수공업지배 — 상인물주의 출현을 중심으로,” 『이조 후기 수공업에 관한 연구』,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 유원동(1983): “조선조 공인자본,” 『한국근대경제사연구』.  
 \_\_\_\_\_(1984): “근대지방상업,”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일지사.
- 윤희면(1990): 『조선시대 향교연구』.
- 원유한(1975): “조선후기 화폐사 시대구분 문제,” 『문학과 지성』 6.3.
- 이병휴(1975): “여말선초의 과업교육 — 서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67.
- 이우성(1963): “18세기 서울의 도시적 양상,” 『향토서울』 17.
- 이준구(1993): 『조선후기 신분지역변동연구』.
- 이호철(1987): 『조선전기 농업경제사』, 한길사.  
 \_\_\_\_\_(1990): “『농서집요』의 농법과 그 역사적 성격,” 『경제사학』 14.  
 \_\_\_\_\_(1992): “조선시대의 인구규모 추계,” 『농업경제사 연구』, 경북대출판부.
- 정석중(1983): “숙종조 갑술환국과 중인 상인 서얼의 동향,” 『조선후기사회변동연구』.
- 조성윤(1992): “조선후기 서울주민의 신분 구조와 그 변화 — 근대시민형성의 역사적 기원,” 연세대 박사논문.
- 천관우(1967): “조선후기 실학의 개념 재검토,” 연세대 제1회 실학 공개강좌.
- 최영호(1984): “유학, 학생, 교생고 — 17세기 신분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역사학보』 101.
- 한상권(1981): “18세기 말-20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 四方博(1938): “李朝人口에 關한 身分階級別的 考察,” 『朝鮮經濟의 研究』 3.
- 速水融 外(1989): 『徳川社會로부터의 展望 — 發展, 構造, 國際關係』, 同文館.
- 新保博 外(1989): 『近代成長의 胎動』, 日本經濟史 2, 岩波書店.
- 林和男(1980): “李朝農業技術의 展開,” 『朝鮮史叢』 4.
- Choi, Jongnam, Keun Bae Yu, and Won-Kyu Park (1992): “Paleoclimate Reconstruction for

- Chungbu Mountainous Region Using Tree-Ring Chronology,” *Korean Journal of Quaternary Research*, **6, 1**, 21-32, The Korean Quaternary Association.
- Government-General of Chosen (1915): *Report on Reform and Progress in Chosen (1913-14)*, Keiju, July.
- Ko, Dong-hwan (1993): “The Commercial Development in Seoul Kyong-gang(京江) Area of the 18th and 19th Centries,” Ph.D Dessertation of Seoul National Univ.
- Lee, Hochol (1989): “Rice Culture and Demographic Development in Korea, C. 1429-1918,” in A. Hayami and Y. Tsubouchi (eds.), *Economic and Demographic Development in Rice Producing Societies*.
- Park, Won-Kyu (1993): “Increasing Atmospheric Cabon Dioxide and Growth Trends of Korean Subalpine Conifers- Dendrochronological Analysis,” *Journal of Korean Forestry Society*, **82, 1**, March.